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 방향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idmail.re.kr)

May
2019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한국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초록

-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의 성 불평등 문제는 인권침해문제에 한정되어 접근되어 왔음. 그런데, 이민자 가족 문제를 앞서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연구 결과, 여성이민자들은 가족생활 상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이를 개선하는데에도 관심이 높지만, 젠더 질서에 있어 ‘한국인’ 여성과 자신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에서 이주여성이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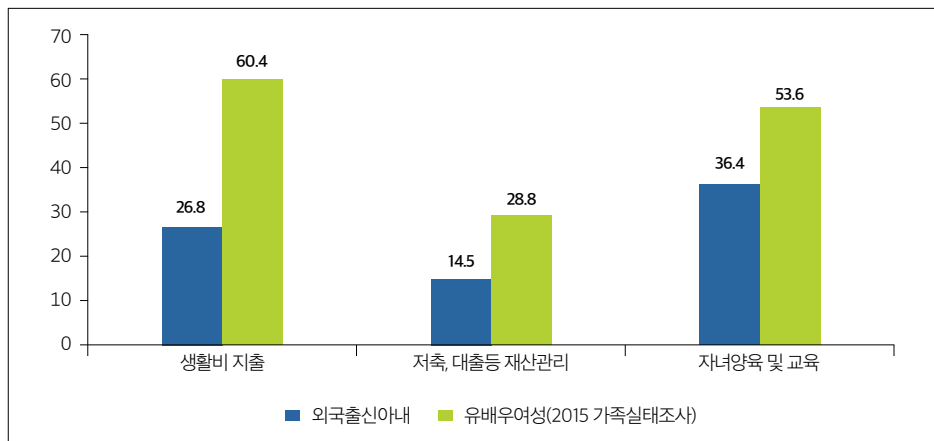
- ① 성별에 따라 서로 구분된 역할과 태도를 규정하고 의무와 권한을 부여, 제한하는 젠더 구조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 국제결혼 부부를 위시한 다문화가족에서도 구성원들의 관계성과 위상을 구성하는 데 젠더 질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가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등에 접근하려면 젠더 질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가사와 돌봄 분담,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 출신 가족과의 관계의 균형성 등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음.
- ②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개인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음.
 - ▶ 이민자 가족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간과되는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다문화가족은 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실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 ③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협상 전개 양상을 포착하고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의 관계성에 접근하였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통합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사례

④ 다문화가족의 젠더 구조 변화 가능성

- ▶ 베트남, 필리핀, 중국(한국계 제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500명과 그들의 한국출신 남편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보수적인 성 역할 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여성이 가사와 일상적 자녀 돌봄은 전담하고 경제권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 일반보다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가족생활 사안별 '아내' 의사결정 비율(%)



- ▶ 다문화가족 내부에서는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과정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젠더구조를 둘러싸고 외국 출신 아내에게 중층적 압력이 부과되는 가운데 일상에 뿌리내린 가족생활의 질서는 여성의 취업, 남편의 실업 등 당사자들의 상황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임.
-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젠더 질서에 변화의 가능성도 커지기 시작하고 있음.
 - 결혼생활 초기 여성이민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불평등한 가족생활이 ‘한국식’임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살려면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시부모의 강력한 영향력은 분가나 시부모의 노화 등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
 -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여성이민자의 변화 요구에 대해 기껏해야 미온적으로만 반응하던 남편들에게도 변화의 기미가 생겨나고 있음.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집안일에 충실한 여성’, 경제권을 나눠 갖기 어려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라는 구도만으로는 가족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생활의 고비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자신과 아내의 역할, 외국 출신 아내의 역량 평가와 권한 등 전반적인 젠더 질서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일부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자신과 부인의 관계도 재정립해 가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음.

▶ 다른 한편, 불평등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요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에 둘러싸여 좌절해 있던 여성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음.

- 극심한 이중부담에 직면해 젠더 질서 변화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변화 요구를 지지하는 ‘내 편’이 등장했음. 현재로서는 젠더 협상에서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지지는 정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주여성단체 활동 참여자, 이주여성 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면 젠더 협상에 임하는 여성들에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지지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임.

④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 평등 실천

▶ 본 연구의 인터뷰 참가 여성이민자(22명) 사이에서는 자신과 ‘한국인’ 여성들이 출신 배경은 다르지만 여성으로서 가사와 돌봄 부담, 권한 등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움.

- 오랜 한국생활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시누이 이외의 ‘한국인’ 여성들과는 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제한된 기회를 통해 발견한 한국인 여성들의 삶은 자신의 처지와는 사뭇 다른 것처럼 다가올 뿐임.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부간 연령 차이, 친정의 지지와 사회적 자원 동원 가능성 등에서 자신들과는 비교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들은 가사와 돌봄 부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보다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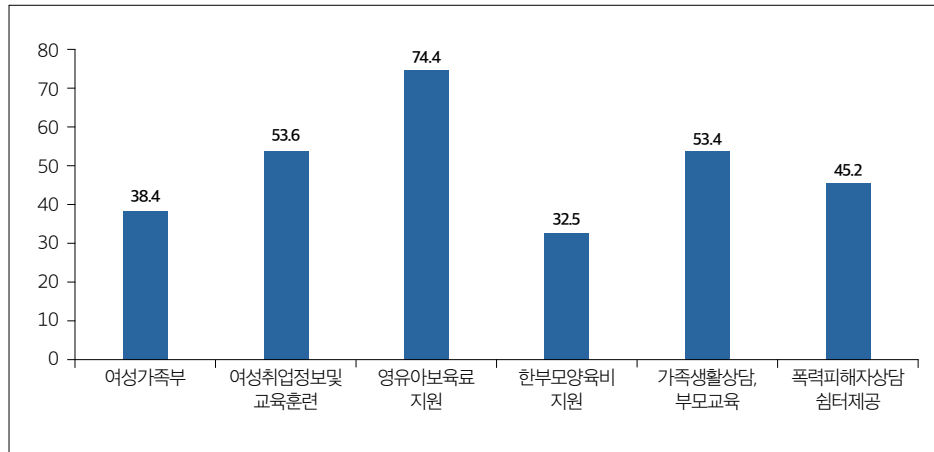
- 또한 ‘한국인’인 시부모나 남편처럼 ‘한국인’ 여성들은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식’ 젠더 질서를 내면화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 여성이민자들이 여러모로 자신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들에게서 ‘한국식’ 젠더 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젠더 질서를 둘러싸고 ‘외국인 아내’에게 중층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출신 배경이 서로 다른 여성들 간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신 배경은 서로 다르더라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형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여성이민자들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베트남, 필리핀, 중국(한국계 제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중 38.4%만이 여성가족부를 인지하고 60% 이상은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 ▶ 서구, 일본 등지에서 이주여성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임.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정책제언

④ 현행 양성평등 정책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위상

- ▶ ‘국민’만을 양성평등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현행 정책의 한계
- 헌법상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대상을 ‘국민’으로 명시하고 ‘국민’만이 양성평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구성원 중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성 평등한 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 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 조항의 적절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특히, 다문화가족처럼 구성원 중 일부는 국민이나 또 다른 일부는 국민이 아닌 이들이 가족을 이룬 경우에는 양성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 양성 평등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의 관계가 모호함.
 - 외국 출신 아내가 직면해 있는 ‘여성’ 불평등 문제와 ‘외국인’ 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
- ▶ 이번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보수적인 성 역할 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여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전담하고 경제권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 일반보다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만 양성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성 평등 실천의 집단 간 격차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제한되는 실정임.

▶ 이주여성에 대한 ‘우편주문신부’ 접근의 한계

- 현행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이주여성은 심각한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이 직면한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문제의식,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찾아볼 수 없음. 이주여성과 성 불평등 문제를 심각한 인권피해 문제에 한정시켜 다루는 전형적인 ‘우편주문신부’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주여성에 대한 현행 정책의 ‘우편주문신부’ 접근은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전시킨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는 한계가 명확함. ‘우편주문신부’에 치중한 접근은 젠더질서에 있어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의 차이를 부각시켜 결국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일반이 직면한 공통적인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주여성이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이외에 광범위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다문화가족이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출신 배경은 다르더라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 간에 공통의 젠더 의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④ 양성평등 정책의 향후 방향

▶ 다문화가족을 통합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 확립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양성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여성’ 불평등과 ‘외국인’ 차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중층적 차별 문제를 양성평등 정책 의제로 채택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양성평등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 이외에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 이중부담 등 일반적인 젠더 의제에 이주여성 통합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성이민자의 인식 제고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젠더 의제에 관한 소통, 연대 기회 마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